

# 민진당 집권 이후 중대만관계 : 분석과 전망

신상진 (통일연구원)

## ◁ 목 차 ▷

- I. 서 언
- II. 대만 총통선거 과정과 결과
- III. 천수이벤 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 IV. 중국의 반응과 양안관계 전망
-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 VI. 결 론 : 정책적 고려사항

## I. 서 언

21세기 벽두에 대만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0년 3월 18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표방하고 있는 민진당 후보 천수이벤(陳水扁)이 집권 국민당 후보 렌잔(連戰)과 무소속 후보 쑹추위(宋楚瑜)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되었다. 그 후 그는 5월 20일 대만의 제10대 총통에 취임하였다.

천수이벤의 총통 취임으로 대만에서 50여년에 걸친 국민당의 통치가 종식되고 대만인에 의한 대만 통치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다. 1949년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해 왔고, 1975년 장제스의 사망 이후에는 장징궈(蔣經國)가 대만을 지배해 왔

다. 1988년부터서는 리덩후이(李登輝)가 대만 총통에 재임해 왔다. 리덩후이는 대만출신이지만 장징궈에 의해 발탁된 인사라는 점에서, 리덩후이 시대까지 대만은 외성인(外省人: 1940년대 후반 중국대륙에서 이주해 온 사람)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수이볜은 대만의 남부지역에서 출생한 토착 대만인으로서 정치무대에 진출한 후 줄곧 대만독립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된 후 대만 내에서 독립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미국은 1979년 중미관계 정상화 직후 국내법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규정에 따라 대만의 안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sup>1)</sup>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대만간 긴장 악화는 중미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동북아정세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천수이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총통에 당선되었는가, 그가 집권한 뒤 중대만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대만관계 변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대만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이 유의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만 총통선거 과정과 결과

대만 총통선거에 집권 국민당의 쑨잔, 민진당의 천수이볜, 무소속 후보

- 
- 1)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1979년 4월 10일 국내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대만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방어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만해협 사태가 대만주민들의 안보와 경제·사회체제에 위협을 미치거나 미국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관계법' 전문은 Richard H. Solomon (ed.), *The China Factor: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Global Scen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1), pp. 304~314 참조.

쑹추위와 쉬신량(許信良) 그리고 대만신당의 리아오(李敖) 등 5명이 출마하여 치열한 각축을 벌인 끝에 천수이벤이 승리하였다.

롄잔, 쑹추위 그리고 천수이벤 등 세명의 후보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혼전이 전개되었는데, 선거 결과 천수이벤이 4,977,737표를 획득하여 전체 투표자의 39.3%의 지지율로 총통에 당선되었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동원한 국민당 후보 롄잔은 2,925,513표를 얻어 23.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불과하였고, 국민당을 이탈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쑹추위는 4,664,932표와 36.8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민진당을 탈당하여 출마한 쉬신량과 투표 직전 쑹추위 지지를 선언한 리아오는 각각 0.63%와 0.13%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쳐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sup>2)</sup>

당초의 예상과 달리 대만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벤이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당 후보 롄잔과 국민당을 이탈하여 독자 후보로 출마한 쑹추위의 득표율을 합치면 약 60%에 이른 반면, 천수이벤은 40%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집권 국민당의 분열은 리덩후이가 1998년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민선 대만성 성장이었던 쑹추위가 이에 반발하여 국민당내 비주류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리덩후이가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는 쑹추위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에게 대만이 중국의 23번째 성이라는 논리적 명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1988년 장징궈 사망이후 리덩후이의 총통승계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던 쑹추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국민당과 결별하게 되었다.

쑹추위는 전직 국민당 사무총장과 대만 역사상 최초의 민선 대만성 성장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여 총통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999년 7월 16일 무소속 후보로 총통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 반면 총통후보 등록 직전까지 리덩후이 총통이 후계자로 지목하였던 롄잔 부총통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여

2) 대만 제10대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羅家傑, “陳水扁先生當選總統,” 「交流」(臺灣海峽交流基金會), 第50卷 (2000. 4), pp. 4~10 참조.

10% 내외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1999년 8월 21일 당 대표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도를 보였던 렌잔 부총통과 샤오완창(蕭萬長) 행정원장을 총통과 부총통 후보로 정식 선출하였고, 국민당 지지자들은 렌잔과 쑹추위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갈라서게 되었다.

더욱이 렌잔 후보 진영과 쑹추위 진영은 총통선거 과정에서 민진당 후보에 대항하기 보다는 상대방 비난에 진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특히 선거 막판까지 렌잔의 지지도가 담보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렌잔에 대한 리덩후이의 미온적 지지태도도 국민당 지지표를 분산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리덩후이 총통이 렌잔을 포기하고 천수이벤을 암중 지원하고 있다(棄連保陳)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리덩후이와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웬저(李遠哲) 중앙연구원장이 천수이벤 지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상당수의 부동층이 렌잔과 쑹추위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총통선거에서 패배한 후 재야로 물러나게 된 국민당은 선거과정에서 쑹추위와 천수이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해당 행위자들을 축출하고 당내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당 당기위원회에서 옌칭표(顏清標) 타이중현 의회의장과 린춘더(林春德) 입법의원 등 53명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였고, 리덩후이는 당내외 압력에 굴복하여 당 주석직을 사임(3. 24)하고, 렌잔이 국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주석직에 선출되어 국민당을 이끌고 있다.<sup>3)</sup> 또한 55명으로 구성된 국민당 개조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주석을 당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함으로써 당내 민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쑹추위는 선거 패배 직후 총통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해 준 인사들과 국민당 이탈자들을 규합하여 친민당(People First Party)을 창당하였다. 총통과 부총통 후보였던 쑹추위와 장자오슝(張昭雄)이 친민당의 주석과 부주석에 선출되었으며, 친민당 창당을 계기로 대만은 민진당, 국민당, 신당 그리고 친민당 간의 4당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sup>4)</sup>

3) 렌잔은 2000년 6월 17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여 94.83%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당 주석에 선출되었다.

4) 친민당 창당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진당 지지자는 23%,

둘째, 본토인과 외성인간 그리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 지역갈등의 표출도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었다. 대만 주민의 80%를 넘는 본토인의 상당수가 대만독립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민진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1940년대말 중국에서 이주해 온 외성인은 중국이 선호한 쑹추위에게 많은 지지를 보였다. 타이난, 가오슝, 핑둥 등 남부지역 유권자들은 천수이볜을 적극 지지한 반면, 지리적으로 중국대륙과 가까운 진먼, 마주, 타이베이, 타오웬지역의 유권자들은 쑹추위를 선호하였다. 이처럼 선거가 지역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됨으로써, 막판까지 30%에 달하였던 상당부분의 부동표가 천수이볜 지지로 기울게 되었다.

한편, 1999년 9월 21일 대만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집권 국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8,000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12,000 가구의 가옥을 전파시킨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난토투와 타이중 지역주민들이 국민당 후보에게 극도로 저조한 지지를 보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셋째, 대만주민들이 중국이 주장해 온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 주권을 회복한 후 중국은 '일국양제' 방식에 의해 전중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통일공세를 강화해 왔다. 2000년 신년사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의 조기 통일을 강조한 바 있고, 200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대만 총통선거 과정에서도 중국은 대만 총통후보들에게 무력수단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하나의 중국원칙'과 '일국양제' 통일방안 수용을 촉구하였다. 특히 중국은 2000년 2월 21일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 제하의 「통일백서」를 발간하여 대만에게 조속히 통일대화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 동안 중국은 대만의 분리독립과 외국세력의 대만문제 개입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의 조건으로 제시해 왔으나, 「통일백서」에서는 대만이 통일대화를 무기한 거부할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하였

---

국민당 지지자는 19%, 친민당 지지자는 12%, 신당 지지자는 1%로 나타났다. “選民重組政黨支持版圖,” 「聯合報」, 2000. 4. 1.

다.5)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도높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대만 주민들이 중국정부에 대해 뿌리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대만정책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감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쑹추위와 렌잔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중국에게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온 천수이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쑹추위와 렌잔은 중국의 후난성과 산시성 출신인 반면, 천수이볜의 본적지는 대만 타이난이기 때문이다. 주요 총통후보의 대중정책 구상은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 대만 주요 총통후보의 양안정책 구상

	양안관계 정의	평화유지 방안	경제무역정책
천수이볜	2개 국가간의 특수관계	대만과 중국관계의 전면적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만은행 중국진출 제한 철폐, 戒急用忍정책 폐기, 국가안전 유지하 조건부 3통 실시 및 투자제한 조치 취소
렌잔	특수한 국가 대 국가관계	상호 호혜적 교류를 통한 적대관계 해소, 평화협의 체결	WTO규정에 의거 3통 실시를 위한 협상 진행, 양안간경제무역 특구 설치, 투자보장협정 체결
쑹추위	상대적 주권을 가진 준국제관계	30년 기한의 상호 불가침 평화협의 체결	戒急用忍정책 폐지, 점진적 직항 실시, WTO 가입후 3통 즉각 실시

출처 : 「交流」(臺灣 海峽交流基金會), 第49卷 (2000. 2), p. 9;  
<http://2000.chinatimes.com.tw/decision2000/strait.htm>

5) 「통일백서」 전문은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國務院新聞辦公室, “一個中國的原則與臺灣問題,”  
<http://www.wenwei/shownews.cgi?newsid=yo02220700&itemno=7&category=t00-02-22> 참조.

넷째, 총통선거 돌입 이후 민진당이 대만독립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였던 것도 민진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1986년 9월 창당 이후 참여한 각종 선거에서 민진당은 4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대만독립을 선거 쟁점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1996년 대만 9대 총통선거에 대만독립을 주장하며 평밍민(彭明敏)이 민진당 후보로 출마하였을 당시 21.1%에 불과한 득표율을 보인 반면, 국민당의 리덩후이 후보는 54%의 압도적 지지로 총통에 당선되었다.

천수이벤은 원래 대만독립을 주장해 왔으나, 선거전략상 대만독립 주장을 제기하지 않고 양안관계를 ‘두개의 중국인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하는 등 과거에 비해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0월 발표한 ‘21세기 중국 정책 백서’에서는 중국과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양안 지도자간 상호 방문과 대화를 제도화하고, 중국과 직접 ‘三通’(通商, 通航, 通郵)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될 경우에도 양안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많은 국민들이 천수이벤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된 후 민진당내 일부 온건파 인사들은 ‘대만독립 공화국’ 수립 조항을 당강령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린이슝(林義雄)에 이어 새로운 민진당 주석에 오른 세창팅(謝長廷) 가오슝시장도 2002년 입법원 선거와 2004년 총통선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민진당 강령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sup>6)</sup>

한편 1997년 민진당 탈당자들에 의해 창당된 건국당의 리전웬(李鎮源)과 리성슝(李勝雄) 등 강경독립론자들이 건국당의 임무가 완성되었다면서 건국당을 탈당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대만독립공화국’ 건립을 주장하는 건국당의 당세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대만독립론자들은 민진당 집권으로 실질적으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6) 세창팅은 “중화민국의 헌법체제는 원래 하나의 중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대만독립 조항을 헌법에 새로 삽입해야 한다는 과거 민진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II. 천수이볜 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천수이볜 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신정부는 대만해협의 긴장완화와 양안간 경제교류 확대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1. 대만해협의 안정유지

민진당의 대중정책 방침은 「21세기 중국정책 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민진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통해 양안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을 대중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중국과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7)</sup>

천수이볜 총통의 취임사도 이러한 대중정책 기조에 입각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할 의사가 없을 경우 천수이볜 총통 임기 동안 독립선언, 국호변경, 양국론 개헌, 독립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5不입장'을 밝히고, 양안관계의 안정화를 '전민정부'(全民政府)의 대중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서 볼 때, 천수이볜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급진적 독립노선보다는 중국과의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천수이볜은 민진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국민당 소속의 전임 국방부장 탕페이(唐飛)를 행정원장에 임명하는 등 거국 내각을 구성하였는 바, 대만 신정부 각료들 중 일부는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대만의 경제계도 천수이볜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대만은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중국경제에 대한 대만경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천수이볜

7) 「21세기 중국정책 백서」 전문은 “跨時期中國政策白皮書,”

<http://election2000.com.tw/BIAN/DOCU/111524bi.html> 참조.

8) '全民政府'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천수이볜은 자신의 정부를 국민을 지도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원형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제계의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중국원칙’ 수용 여부가 향후 중국과 대만관계 개선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천수이볜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천수이볜은 ‘하나의 중국문제’를 의제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양안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총통 취임사에서 1991년 국민당 정부가 제정한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고 중국과 통일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9)</sup>

대부분의 대만주민들도 양안간 긴장고조를 바라지 않으나,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방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월 21일 중국이 「통일백서」를 발표한 직후 실시한(2. 23~26) 대만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일국양제’ 방안을 지지한 응답자는 9.8%에 불과하였고, 78.8%가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13.9%에 그쳤고, 45%의 응답자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39.4%는 ‘중국인이며 대만인’이라고 답하였다.<sup>10)</sup>

요컨대, 천수이볜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지만 중국에게 무력사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재개 노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2. 경제교류 확대 모색

1987년 대만정부가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를 허용한 후 대만기업이 400

9) ‘국가통일강령’에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면서 중국대륙과 대만 모두가 중국의 영토이며 라는 점을 확인하고 3단계 통일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통일강령’ 전문은 行政院大陸委員會 編, 「大陸工作參考資料」, 合訂本, 第壹冊 (臺北: 行政院大陸委員會, 1998), pp. 13~15 참조.

10) “民衆對當前兩岸關係之看法結果摘要,” <http://www.mac.gov.tw/mlpolicy/pos/8903/poch.htm>.

억 달러가 넘는 자본을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양안간 연간 교역규모가 257억 달러에 달하여 대만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11%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과 경제교류를 단절하게 될 경우, 대만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만 신정부는 양안간 경제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선 총통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수이볜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국과의 '삼통'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21세기 중국정책 백서」에서도 민진당은 중국과 대만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양안간 '삼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욱이 총통선거 직후 대만 입법원은 대만의 진먼, 마주, 평후지역과 중국대륙과 소규모의 '三通'(小三通)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법안(離島開發建設條例)을 통과시켰는데, 대만 입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대만간 '삼통' 시행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sup>11)</sup>

또한 대만 신정부는 1996년 이래 국민당 정부가 실시해 온 대대륙 투자 제한조치(戒急用忍政策)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 정부는 대대륙 투자금지분야, 집중심사분야, 투자허가분야를 규정하여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해 왔으나, 천수이볜 정부는 투자금지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의 대중국 투자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SOC건설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단일항목 5,000만 달러 이상의 대중국 투자도 점진적으로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중국과 '삼통'을 실시하고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대중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나, 천수이볜은 대만의 안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만의 총 수출상품의 18%가 중국에 수

11) 탕페이 대만 행정원장은 연내 '소삼통'을 시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대만정부는 진먼도 해안지역에 부설된 기뢰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http://www.chinatimes.com.tw/news/cna/0000air.htm>.

12) 2000년 6월 5일 대만 경제부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제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협력 심사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http://www.peopledaily.com.cn/GB/channell/14/20000605/89000.html>.

출되고 있고, 2005년에 이르면 대만경제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26%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sup>13)</sup>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면 대만은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만 신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 IV. 중국의 반응과 양안관계 전망

### 1. 중국정부의 반응

민진당 후보가 대만의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된 후, 중국은 줄곧 대만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신지도자의 언행을 관찰하겠다(聽其言觀其行)는 자세를 보여왔다.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기 이전까지 중국은 간접적으로 천수이볜을 비난하였으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된 이후에는 대만 신총통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천수이볜 총통 취임 직후 중국은 대만당국이 ‘양국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면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가 대만이 지정한 단체나 인사와 대화에 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sup>14)</sup>

1996년 대만 총통선거 당시와 달리, 중국은 「人民日報」, 「解放軍報」, *China Daily* 등 당군정 기관지를 동원하여 대만에게 ‘4不’<sup>15)</sup>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文攻’(문장을 통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무력수단을 사용하기 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력사용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1996년 당시 보다 장쩌민체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 “跨時期中國政策白皮書.”

14) <http://www.xinhua.org/1dh/htm/005201915481.htm>.

15) 중국이 대만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4不’ 입장은 ‘不臺獨’(대만독립 반대), ‘不兩國論’(양국론 반대), ‘不改國號’(국가명칭 변경 반대), ‘不搞公投入憲’(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반대) 등이다.

아울러 대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광조우군구와 난징군구 소속의 인민해방군은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미제7함대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대형 구축함을 도입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기경보기 구입을 시도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도록 요청하고, 대만의 신정부가 관계개선을 시도하고자 하는 유럽, 중남미, 아시아국가들에게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2000년 5월 2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시에도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대만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대만간 관계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일국양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화교사회에 대해서도 대만독립 반대 여론을 고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압력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중국내부 단결을 모색하려는 데에도 있다. 1999년 이래 중국에서는 사교집단으로 규정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자문제 등으로 사회안정과 단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만문제와 같은 민족문제 해결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 2. 중·대만관계 전망

상기 대만과 중국의 정책자세를 통해서 볼 때, '하나의 중국원칙'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양안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제한적 '三通'과 대화재개를 통해 긴장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16) 8억달러를 지불하고 러시아에서 구입한 구축함 1척이 2000년 2월초 대만해협을 경유하여 중국 해군기지에 입항하였는데, 이는 중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중 가장 큰 함정이다. 금년 가을에는 또 다른 1척의 신형 구축함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여 중국과 대만관계가 파국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도 양안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미국 변수가 양안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 '모호한 정책'(policy of ambiguity)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대만문제에 대한 '三不' 입장을 지속함으로써 대만의 독립을 방지하려 하고 있고,<sup>17)</sup>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에게 대만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가 대만문제에 대해 이중적이고 모호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대만에게는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에게는 무력사용을 저지하려는 데 있다.<sup>18)</sup>

한편, 미국 의회는 대만을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만안보강화법안'을 통과(2월 1일 하원 통과, 상원에는 계류중)시키고, 대만을 TMD에 포함시켜야 하며 중국에게 '영구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시 대만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19)</sup> '대만안보강화법안'은 미국 행정부에게 대만 군간부를 훈련시키고 대만에 대해 충분한 방어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17) 대만문제에 대한 '三不'원칙은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중시 표명된 것으로 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반대, 주권국가 자격으로 대만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8)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잘 설명된 글은 Zbigniew Brzezinski, "Living with China," *The National Interest*, No. 59 (Spring 2000), pp. 12~16를 참조.

19) 2000년 5월 24일 미국 하원은 237표 대 197표로 '영구 정상무역관계'(PNTR)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 25인이 참여하는 '중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인권 상황을 감독하여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중국상품의 대미수출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미국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무역대표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peopledaily.com.cn/GB/channel12/17/20000525/77014.html>.

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의회가 행정부에게 대만안보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대만해협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으나, 대만이 명확하게 독립노선을 추구하지 않는 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째, 중국은 21세기 중반까지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미·일 등 서방 선진국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1999년부터 서부지역 대개발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및 대만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많은 대만자본이 진출해 있는 푸젠성 등 중국 동남부 지방세력이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 대만간 경제교류 증가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홍콩 주민들도 양안간 갈등 심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현재 중국이 120마일이 넘는 대만해협을 도하하여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sup>20)</sup> 여섯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성공적으로 점령하게 되더라도 중국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공과정에서 예상되는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과 대만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대만 신정부가 국제무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외교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대만간 각축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천수이볜은 총통 취임사에서 '인권외교'와 '비정부조직 외교'를 통해 국제활동 공간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고, 뤼슈롄(呂秀蓮) 부총통은 1991년부터 대만의 유엔 가입운동을 주도해 온 사회운동가였다. 따라서

20) 중국이 대만에 대해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만보다 3배 이상의 병력과 화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군기와 해군함정들이 노후되어 대만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정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은 대만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의 병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Zbigniew Brzezinski, "Living with China," p. 14; "Taiwan Stands Up," *The Economist*, March 25, 2000, p. 28; Denny Roy, "Tensions in the Taiwan Strait," *Survival*, Vol. 42, No. 1 (Spring 2000), pp. 82~85 등 참조.

대만은 유엔, 유엔보건기구, 아세안지역포럼 등 국제기구 가입 시도를 강도높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이미 타결시켰고 미 의회가 중국에 '영구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내에 중국과 대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예상된다.<sup>21)</sup> 따라서 현재까지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통상, 통항, 통신을 반대한다는 '三不政策'을 채택해 왔으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과의 '三通' 실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1996년 이래 대만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채택한 '戒急用忍'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안간 무역거래와 투자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1월까지 중국에 투자된 대만기업의 자본은 44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대만기업의 40%이상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다.<sup>22)</sup> 양안간 누적 교역규모는 1,323억 달러에 달하며,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10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9년에도 대만은 중국과 234억 8천만 달러를 교역하여 155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sup>23)</sup> 대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9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보유고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흑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증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 1.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중대만간 긴장 지속은 중미, 중일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중

21) 중국은 자신이 WTO에 가입한 뒤 대만이 국가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한 경제지역의 자격으로서 W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 "發展兩岸關係, 實現和平統一," 「文匯報」(香港), 2000. 1. 29.

23) <http://www.udnnews.com/Finance/Taiwan-China-Trade/323197.htm>.

러, 중북간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동북아정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어 미국의 대중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대만의 TMD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일본과 한국 등 지역국가와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할 것이며, '대만안보강화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 판매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을 미국의 '잠재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양안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이 지속된다면, 미국 국방부와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견제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sup>24)</sup>

중국에서 대만문제로 인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고취되고 일본에서 역내 역할증대를 요구하는 보수 우익세력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간에는 경제적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정치·안보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일본은 1999년 통과된 '주변사태법안'에 기초하여 대만해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의 중요한 해상 수송로인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댜오위도(釣魚島) 영유권 문제와 과거사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 마찰이 심화될 소지도 예상할 수 있다.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 중일관계 경색은 중러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96년 베이징에서 장쩌민과 엘친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중국과 러시

24) 미국 합동참모부는 'Joint Vision 2020'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2020년 경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For Pentagon, Asia Moving to Forefron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world/asia/A7981-2000May25.html>.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질서 형성을 견제해 왔는데,<sup>25)</sup> 대만문제에 의해 중국의 대미·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의 안보관계 강화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중국은 미·일·대만의 TMD 구축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추진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금지조약(ABM) 개정 노력에 더욱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신형 구축함과 수호이 37 전투기 등 첨단 군사무기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1999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발생 이후 중북한간 안보협력 관계가 강화된 바와 같이, 대만사태 악화로 인한 중미관계 경색은 중북한간 군사적 유대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발생 직후인 1999년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어 김일성 사망이후 단절되었던 중북한간 최고지도자 교환방문이 재개되었고, 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대하며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sup>26)</sup> 2000년 5월 29일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의 대대만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유의할만한 사실이다.

## 2. 한반도에 미칠 영향

신총통 취임 후 대만이 대북한 접근정책 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여, 한·대만간 비정치적 관계개선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천수이볜 총통 당선자는 한국의 두 대학으로부터

25) 중국과 러시아간 '전략 협력동반자관계' 발전과 세계질서의 다극화 주장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馬鈞生, "順應國際潮流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9年 第3期 (1999. 7), pp. 12~14; 馮玉軍, "對中俄戰略協作伙伴關係的再思考,"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8期 (1998. 8), pp. 2~6; 劉桂玲, "中俄在安全領域合作的前景及問題,"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12期 (1998. 12), pp. 18~21; "江澤民主席與葉利欽總統通電話," 「人民日報」, 1999. 5. 11. 등 참조.

26) 「人民日報」, 1999. 6. 5.

27)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만의 공상협진회(工商協進會)는 2000년 11월 서울에서 8년 동안 중단된 '한국·대만 경제협력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

터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한 친한파 인사이며, 대만 민주화 투사로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많은 감명을 받은 지도자이기도 하다. 천수이볜은 자신의 정부를 '全民政府'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의 대한국 접근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의 정치·안보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과 전통우호관계 복원정책을 적극화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한·중간 정치·안보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대만의 국제고립 타개 시도를 봉쇄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북한도 중국과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위협과 압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하에 2000년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였던 것이다.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 중일관계 불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은 한국에게 TMD 가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주한 미군이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철군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으나, 중국의 대미·일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미 불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서 남북한과 중, 미간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4자회담에서는 4개국 전원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보이게 된다면 4자회담 틀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다.

## VI. 결론 :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은 대만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중수교 이후 조성된 대만과의 불신

---

의하였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의회차원의 외교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하여 조성된 양국간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 내에 대만이 WTO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대만이 자동차와 과일 등 한국 상품의 중요한 수출기지라는 점에서 대만과의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만과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모색하되, 중국의 입장을 자극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측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 관계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해 안보·정치 협력관계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 중일간 갈등은 동북아 안보구도를 한미일 대 중·러·북한 사이의 대결구도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주한미군을 지역 안정유지 세력으로 보다는 중국전체 세력으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의 참관을 허용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대만 간에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평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지방정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과의 평화대화를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만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한국이 북한을 안심시키면서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해야만 남북한이 평화통일문제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